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 | |
|---------|--|
| 사 건 | 2010구합14610 해임처분취소 |
| 원 고 | 채□□ 광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주○○ |
| 피 고 | 경기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이●● |
| 변 론 종 결 | 2011. 3. 31. |
| 판 결 선 고 | 2011. 4.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4.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2008. 12. 1. 경사로 승진하였고, 2009. 7. 3.부터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0. 4. 23., 원고가 2010. 1. 30. 유흥업소에서 음주 후 성매수를 하고, 2010. 3. 9.과 2010. 3. 30. 2회에 걸쳐 유흥업소에서 1,03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외상으로 제공받았으며, 해군 초계함(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한 전(全) 경찰 율호비상근무기간 중 음주자제 등 기본근무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하달받았음에도 2010. 3. 31. 음주 후 지각 출근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따라 원고를 해임할 것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4. 23. 원고를 해임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0. 7. 28. 소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 부존재

가) 원고는 이國國과 서로 마음이 맞아 성관계를 하였을 뿐 성매수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원고가 2010. 3. 9.과 2010. 3. 30. ○○스트 주점에서 술은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2010. 3. 9.에는 친구 임○○가 술값을 카드로 지불하려고 하다가 카드단말기의 고장으로 그 지불이 안 되어 다음날인 2010. 3. 10. ○○스트 주점의 사장 조○○에게 술값 480,000원을 결제하고, 며칠 후 원고가 원고 뭉인 240,000원을 임○○에게 건네 주어 모두 결제하였으며, 2010. 3. 30.에는 조○○이 ○○스트 주점을 정리한다며 마지막으로 술을 사겠다고 하여 마신 것으로, 외상으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

다) 원고는 을호비상근무기간 중 음주를 자제하였으나 2010. 3. 30. 술자리가 근무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고 친구들과 친목을 다지는 가벼운 자리여서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 다음 날 지각한 것은 전날 음주로 늦잠을 잤기 때문으로, 고의로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없다.

라) 그럼에도 피고는 대질신문을 거치지 않아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고 그 내용도 허위인 이○○, 박○○의 진술만을 근거로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징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징계재량의 일탈·남용

설령 비위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비위행위의 내용과 과실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11년간 근무하면서 대민업무에 충실하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표창 등 5회의 표창수상공적이 있는 점, 처자식과 장모를 부양해야 하고 노모가 투병 중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를 해임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가)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 을 제14, 15호증(각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2, 5, 6, 7, 을 제12, 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2(원고, 임○○, 조○○이 작성한 서면과 사법경찰리 작성의 위 자들에 대한 진술조서이다)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 증인 임○○, 조○○의 각 증언은 앞서 든 증거들 및 원고와 임○○, 조○○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원고는 앞서 든 증거들 중 이 사건 징계사유와 부합하는 내용의 사법경찰리 작성의 이○○, 박○○에 대한 진술조서는 원고와 대질신문절차 없이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있는 허위내용의 진술조서로서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질신문은 조사자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질신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고, 그 진술내용이 장부 등 서면자료에 근거한 것이거나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도 있다).

(1) 원고는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인삼 등을 판매하는 임○○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조○○(2010. 2. 중순부터 2010. 3. 중순까지는 박○○와 ○○스트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을 알게 되었다.

(2) 원고는 2010. 1. 30. 포천시 ○○동 소재 ■■■ 유흥주점에서 임○○, 조○○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조○○으로부터 20만원을 수수한 위 유흥업소 여종업원 이○○과 함께 조○○의 차를 타고 모텔로 이동하여 이○○과 성관계를 하였다.

(3) 원고는 관내 업소로서 당시 조○○과 박○○가 함께 운영하던 ○○스트 유흥주점에서 2010. 3. 9.에는 임○○와 함께, 2010. 3. 30.에는 임○○, 조○○과 함께 여종업원을 불러 각 480,000원, 550,000원 상당의 술을 마셨는데, 위 술값이 지불되었음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4) 원고는 2010. 3. 30. 위와 같이 음주 후 2010. 3. 31. 09:40분경 지각 출근하였는데, 당시는 2010. 3. 26. 해군 초계함(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전(全) 경찰을 호비상근무기간 중으로 긴급상황에 대한 즉응태세를 확립하고, 회식이나 음주, 유흥업소 출입 등을 자제하라는 긴급·특별지시공문이 수차례 하달되던 때였다.

(5) 한편 원고는 전근무지인 서울 ○○경찰서 압구정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관내 업소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고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2009. 3. 20.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2009. 6. 23. 관심직원 '가급'대상으로 선정되어 이 사건 처분시까지 관리대상이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유흥주점에서 업주 등 직무관련자와 함께 여종업원을 불러 유흥을 즐기고 성매수를 하거나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전(全) 경찰의 을 호비상근무기간 중에 음주 후 지각 출근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57조의 복종의 의무, 제63조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재량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하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에 관하여 보건대, 성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관내 유흥업소에서 업주와 함께 술을 마시고 여종업원과 함께 유흥을 즐기다 성매수까지 나아간 점, 해군 초계함 사건으로 인한 울호비상근무기간 중으로 수차례 음주자제 및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지시가 하달되는 상황에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지각 출근한 점, 이미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차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서로 관련 없는 비위가 2개 이상 경합된 경우로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비위행위는 앞서 받은 징계처분으로 인해 공무원징계령에서 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에도 불구

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준현 _____

 판사 이영남 _____

 판사 김선아 _____

관계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 (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80조 (징계의 효력)

- ①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⑤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공무원임용령(2010. 6. 15. 대통령령 제22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승진임용의 제한)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가. 강등·정직: 18개월
 - 나. 감봉: 12개월
 - 다. 견책: 6개월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

제5조(징계의 가중)

-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사유의 경합)

-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끝>